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41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10월 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대전고등법원
재정신청 선고
시한 지나

6월에 재정신청했는데, 아직도..

검찰에 이어 법원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정권의 충실한 개로 전략한 검찰보다는 그나마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마저도 무너지고 있다. 법관들도 정권과 자본의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 씁쓸하다. 노조파괴 사건 재정신청을 다루고 있는 대전고등법원은 법에 정해진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고법 앞에서 노숙하며 답변을 기다리는 노동자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고 있다.

법대로 판단하면 된다

재정신청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라는 것이다. 당장 처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재판은 받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노조파괴 사업주들을 아예 법정에 세우지조차 않았다. 대전고법의 법관들이 법대로만 판단한다면 이번 재정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혐의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재판에서는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했다고 판결에 명시했다. 그리고 당시의 직장폐쇄가 불법이었다는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형사처벌을 해야 할 검찰은 이것을 외면했다. 법원이 같은 법원의 판결마저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미 노조파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판결들을 존중한다면 적어도 노조파괴 사업주들을 법정에 세우는 재정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 도대체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조차 가로막는 만행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최근 노조파괴 사업장들은 어용노조들의 횡포 속에 몸살을 앓았다. 노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어용노조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사에 갖다바친 것이다. 노조파괴가 2 ~ 3년의 시간이 흐르자 어용노조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은 어용노조를 이용해 현장을 맘껏 주무르고 있다. 적어도 검찰과 법원이 법에 정해진대로만 했어도 자본의 횡포를 조금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법부는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범죄의 모든 피해를 현장의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대전고법은 정문 앞의 노숙 중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정의는 지금 노숙농성장에 있다.

대전고법은 눈치 보지 말고 양심껏 판결하라!

노조는 폭력집단? PLA자본의 천박한 인식

정리해고를 향해 일방통행 중인 PLA자본이 노조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 한숨짓게 만들고 있다. 지회와의 교섭자리에서 노측 교섭위원의 폭력을 거론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PLA는 3차까지 희망퇴직을 진행했고,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회에 통보했다. 지회는 2014년 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입장을 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섭은 시작하자마자 파행으로 내달렸다. 사측이 교섭장면을 캠코더로 찍겠다면서 지회의 폭력을 운운했기 때문이다. 교섭 중 노측 교섭위원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것이다.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사측 교섭위원들은 퇴장하고 말았다.

교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PLA자본의 모습은 안타깝게 그지없다. 그동안 정리해고만을 위해 달려온 자본이니 노조와는 대화할 의지조차 없었을 것이다. PLA자본에게 교섭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해 그저 횡수만 채우는 자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회를 폭력집단처럼 매도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만든 책임은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PLA의 정리해고는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삭발, 단식.. 청주시 노인병원 투쟁 거세진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어렵게 재개된 노사 교섭에 한수환 병원장이 거듭 불참하고 병원을 관리·감독하는 청주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노조가 전면전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는 파업 188일째인 2일 권옥자 분회장이 삭발을 했다. 오는 6일 청주시청 앞 단식 농성 돌입까지 예고해 갈등은 더 불거질 전망이다.

청주노인병원은 지난 3월부터 노사 교섭이 진척되는 와중에 사측이 간병사 근로형태 변경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노사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체불임금,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드러나고 노조파괴 의혹이 제기돼 사태가 악화됐다. 충북 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 측이 노조원에게 진행한 해고와 징계 전보, 대기발령의 조치가 모두 부당하고 판정하기도 했다.

청주시가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미적거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주시는 지난 7월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환자의 안전과 인권침해 그리고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특별점검과 정기 노무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 협약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 조치하겠다”고 했다. TF팀까지 구성됐지만 노조는 청주시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지만..

새누리당 “기업인 소환 부적절”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서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7일 환경부, 8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사내하청과 다단계 하도급을 포괄하는 간접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필두로 간접고용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사업장 대표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 179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비슷한 목적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그룹 차원의 업무 지시·개입 의혹을 수차례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인력운용 시스템에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묻고 해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노동현안을 따로 점검하는 대신 피감기관의 사업과 정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간 국정감사 준비 기조가 다르다 보니 양측이 합의해야 하는 증인 확정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국감장으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iswcool@naver.com



<9.29 대전 샘머리공원 촛불집회>



<9.30 유성영동지회 총회>



<9.30 대전고법 노숙투쟁_108배>



<9.30 대전고법 노숙투쟁_108배>